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론 담론 분석과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프레이밍·재현·복지 담론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세 형**

신구대학교

경계선지능인(BIF)은 전체 인구의 약 13.59%를 차지하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집단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 기사 893건을 대상으로 설명적 순차 혼합연구방법(양적 내용분석·질적 CDA)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재현 프레임의 구조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취약성’(31.8%)과 ‘제도적 공백’(26.5%) 프레임의 결핍 서사가 지배적이었으며, 의료적 모델(53.4%)이 사회적 모델(19.2%)을 압도하였다. 최근 급증한 혼합 담론(20.1%)은 권리 어휘를 표방하면서도 인과 구조는 의료적 진단·선별 체계에 종속되는 ‘수사적 전환’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정책입안자 중심의 정보원 구조(63.2%)가 고착된 반면 당사자 직접 발언은 13.9%에 그쳤다. ‘느린 학습자’ 명명은 지배 담론에서 정상성 담론의 결핍 언어로, 권익운동 맥락에서는 자립 옹호의 전략적 언어로 기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핍 중심 표상이 비판적 성찰이 부재한 사회복지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낙인 전이(Stigma transfer)’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강점 기반 실천 기술·담론적 옹호 역량의 3대 핵심 역량과 교과 모듈 통합 및 언론 준칙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경계선지능인, 언론 담론 분석, 프레이밍 이론, 비판적 담론분석, 낙인 전이

* 이 논문은 신구대학교 교원전공역량강화사업(2026-교013)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이세형/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Tel: 031-740-1515/E-mail: lsh@shing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024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IQ 70~84)을 향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실태조사 실시, 조기선별 도구 개발, 학령기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성인기 직업훈련 강화 등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논의도 이어져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9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상자 정의, 주무부처, 추진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계속 심사가 결정되었고 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단독 법률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대두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원이 없는 진단’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공청회에서는 조기 진단이 반드시 구체적인 지원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대안 없는 진단 자체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쟁점은 단순히 법제적 설계의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언론이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재현해 왔는가라는 담론 구조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즉, 이들을 선별과 진단의 대상인 의학적 객체로 그려 왔는가, 아니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로 그려 왔는가라는 거시적 인식 구조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 클라이언트를 마주할 때, 복지사의 인식과 태도는 전문 교육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담론’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 미디어 프레임이 전문직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인식과 실제 실천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심리

학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Corrigan et al., 2005; Klin & Lemish, 2008). 특히 경계선지능인처럼 정규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집단일수록, 사회복지사가 실천 판단의 준거를 세울 때 미디어 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교육 및 복지 현장에서 통용되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 명명이 결핍의 담론과 권리의 담론이 교차하는 각축의 결절점이기 때문이다. 이 명명은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최근 3주기 기준 41.2%까지 확산되며 가장 빠르게 사용 빈도가 늘어난 표현이다. 용어의 혼용이 경계선지능인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이질적 집단으로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어 학계에서는 ‘경계선급 지적기능성’으로의 통일을 제안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박윤희 외, 2022). 반면, 비영리단체 ‘피치마켓’의 사례처럼 권익운동의 맥락에서는 정보 평등과 자립 지원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적 권리의 언어로 전유되는 다중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느린 학습자’ 명명은 단편적 평가가 아니라 지배적 언론 담론의 결핍 서사와 권익운동의 자립 서사가 충돌하는 다차원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제화의 과도기에 놓인 현재 시점에서 경계선지능인을 다룬 언론 보도의 구조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언론 담론이 생산하는 낙인이 사회복지사의 무의식적 편견을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되는 ‘낙인 전이(Stigma transfer)’ 경로를 이론적으로 구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실천 역량(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강점 기반 실천 기술, 담론적 옹호 역량)과 전공 교과과정 내 모듈 통합 등 교육·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떤 시각(프레임)으로 이들을 묘사해 왔는지 그 구조적 특성과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다룬 언론의 논조가 개인의 결함에 집중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델’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 편향성을 규명한다. 셋째, ‘느린 학습자’라는 명칭이 지닌 두 가지 상반된 성격, 곧 당사자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결핍의 언어)’으로 간하게 만드는 측면과, 당사자 권익운동에서 ‘정보 평등과 자립을 요구하는 권리의 언어’로 활용되는 양상을 추적하고 그 사회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넷째, 미디어가 만든 지배적인 편견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발생할 수 있는 가설적인 실천 오류 시나리오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대상’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경계선지능인 관련 언론 보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 유형은 무엇이며, 2010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계열적 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언론 담론에 내재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편향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어떻게 배제하는가?
- 연구문제 3. 이러한 담론 구조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이론적 영향은 무엇이며, 낙인 전이로 인한 실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하나의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세 가지 차원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Entman의 프레임링 이론은 언론 보도 893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내용분석에 적용되어, 언론이 경계선지능인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을 규명하는 ‘연구문제1’을 다룬다. 둘째,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은 52건의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질적 심층분석에 적용되어, 언론 보도에 숨겨진 복지 모델의 편향성과 당사자의 주체성 배제 문제를 파헤치는 ‘연구문제2’를 다룬다. 셋째, Goffman, Link & Phelan, Corrigan으로 이어지는 낙인 이론의 흐름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한 이론적 추론에 적용되어, 미디어의 편견이 현장 복지사에게 옮겨가 발생하는 실천 오류와 필요한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문제3’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철학인 ‘강점 관점’과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이 세 가지 이론적 분석 전체를 관통하며, 올바른 연구 해석의 기준이자 지향해야 할 실천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

<표 1> 분석틀-분석방법-연구문제의 대응 구조

이론적 틀	분석 방법	주요 분석대상	연결 연구문제
Entman (1993) 프레임링 이론	양적 내용분석 (893건)	프레임 유형 분포·시계열 변화	연구문제 1 (프레임 구조)
Fairclough (1995) CDA 3차원 모형	질적 비판적 담론분석 (52건)	명명·은유·정보원·이념 경합	연구문제 2 (모델 편향·주체성)

낙인 이론 계보 (Goffman 등)	이론적 추론	미디어-전문 직-클라이언 트 경로	연구문제 3 (실천 영향·역량)
강점 관점·사회적 모델	규범적 증거	결핍 담론 비판·실천 방향	전 연구문제 관통

주: 강점 관점(Saleebey, 2006)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Oliver, 1990)은 특정 분석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분석 전반의 해석적·규범적 준거로 작동한다.

1. 경계선급 지적기능성(BIF)의 개념, 특성 및 정책적 현황

1) 상태 지시어와 사람 중심 표현의 구분

경계선지능을 가리키는 용어는 그동안 복지 및 교육 현장에서 ‘학습지진’,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논의의 정확성을 기하고 담론의 구조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 특성을 지시하는 ‘개념어’와 그러한 특성을 지닌 당사자를 명명하는 ‘사람 중심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경계선급 지적기능성(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은 지적·적응 기능의 특정한 상태나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어이며,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지능인’은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특정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와 그 상태를 지닌 사람을 지시하는 용어는 개념적 층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윤희 외(2022)는 국내 연구 문헌의 종합 분석을 통해 개념어로서 ‘경계선급 지적기능성(BIF)’이라는 통일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 분석이라는 연구 맥락에 맞추어, 정책 문서와 언론 기사에서 널리 통용되는 사람 중심 표현인 ‘경계선지능인’을 본문에 주로 사용하되 학술적 맥락이 필요한 곳에서는 개념어 BIF를 함께 표기한다.

2) 특성

진단 기준상 경계선급 지적기능성은 DSM-IV에서 IQ 71~84 범위의 발달 주의군으로 규정되었으나, DSM-5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의가 변화하였다(이세형, 2024b). Orío-Aparicio 외(2025)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의 적응기능 결함은 개념적·사회적·실용적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Hassiotis 외(2022)의 연구에서는 실행기능, 작업기억, 선언적 학습, 시공간 기능에서의 결함이 보고된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결함의 목록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이세형(2024b)의 질적 연구에서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강의 녹음 후 반복 청취, 성실한 시간 투자,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 학업을 지속 시키는 강점 자원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기에 경계선지능인은 주로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며(Peltopuro et al., 2014, 2020), 비장애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고 그 주된 요인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보고된다(Hatton et al., 2017).

3) 정책적 현황

정책적 측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비교적 최근 본격화되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어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곳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이세형, 2024a). 2024년 7월 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9건의 지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5년 11월 현재까지 단독 법률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진단·선별을 둘러싼 제도화는 진전되는 반면 지원 체계의 법적 기반은 아

직 갖추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 본 연구가 담론을 분석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룬다.

2. Entman의 프레이밍 이론과 경계선지능 보도

Entman(1993)은 프레이밍을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텍스트 속에서 부각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것이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라는 네 가지 인과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프레이밍의 본질은 객관적 사실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가림으로써 수용자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저성의 조작에 존재한다. 이러한 프레임 기능은 언론의 경계선지능인 보도 방식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투영된다. 지배적인 언론 담론 중 하나인 ‘피해·취약성’ 프레임은 경계선지능인이 지닌 개인의 인지적 결함을 문제의 핵심이자 원인으로 진단한다. 나아가 이들을 능동적 주체가 아닌 시혜와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한 대상으로 도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해결책 또한 일방적인 보호와 시혜라는 협소한 틀 거리에 가둔다. 이 프레임은 표면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수동적인 위치에 고정하여 의존성을 심화하는 권력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 다른 양상인 ‘가해·위험’ 프레임은 문제를 사회 안전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개인의 충동성에 귀속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잠재적 범죄자나 위험 인물로 다루어지며 사회 방어의 대상으로 호명되는 왜곡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미디어 프레임은 동일한 사안을 전혀 다른 인과 구조와 도덕적 잣대 위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대안과 정책적 상상력의 경계 자체를 규정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므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단위가 된다.

3.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DA) 3차원 모형

Fairclough(1995)의 3차원 모형은 담론을 미시적 차원의 텍스트 수준(명명 방식, 은유, 어휘 선택, 문장 구조)과 중범위 차원의 담론 실천 수준(정보원 구조, 기사 생산 방식),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실천 수준(거시적 이념 구조, 권력 관계)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개별 기사에서 사용된 어휘 선택이 어떠한 정보원 구조를 거쳐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사이의 거시적 이념 경합으로 연결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 틀로 삼아 경계선지능인 관련 보도가 특정 정보원 구조를 통해 생산 및 유통되는 방식을 규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서 어떠한 지배적 담론을 강화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4. 강점 관점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 비판적 수용

Salisbury(2006)의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자원을 탐색하고 지지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철학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토대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 환경의 산물로 규정하는 Oliver(1990)의 사회적 모델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두 관점의 결합은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을 당사자의 결함을 교정하는 미시적 개입에서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시적 개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강점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역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Rapp과 Goscha(2011)는 강점 관점이 개인의 회복력과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책임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Gray(2011)는 강점 관점이 기존의 결핍 관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분법적 함정에 빠져 당사자의 강점만을 발굴해야 한다는 실천적 경직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점 관점을 기존 언론의 결핍 담론을 비판하는 대안적 출발점으로 삼되, 거시적 불평등과 환경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Bronfenbrenner(1986)의 생태체계적 관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5. 낙인 전이(Stigma Transfer)의 이론적 계보와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핵심 메커니즘인 낙인 전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낙인 이론의 학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offman(1963)은 낙인을 온전한 한 개인을 결함이 있는 존재로 환원시키는 속성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표시가 고정관념과 분리를 거쳐 차별로 이어지는 단계를 기술하였다. Link와 Phelan(2001)은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낙인이 명명화, 고정관념 형성, 지위 분리, 지위 손실 및 차별로 이어지는 하향식 연쇄 과정을 모형으로 입증하였다.

Diefenbach(1997)와 Ross 외(2019) 등 미디어의 낙인 유발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넘어, Corrigan(2007)은 임상가나 사회복지사 같은 보건복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하는 임상적 진단명 자체가 낙인을 도리어 강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는 본래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미디어 보도를 소비하는 시민이기도 하므로 비판적 성찰 능력이 부재할 경우 주류 언론의 지배적인 인식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여 낙인의 재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최근 연구인 Winterbotham 외(2023) 역시 호주의 대규모 복지 제도 개혁 국면에서도 미디어가 의존과 시혜의 서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음을 밝혀, 구조적 제도 변화가 미디어 담론의 관성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우려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낙인 전이 개념은 Goffman-Link & Phelan-Corrigan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계보를 계승하되, 주류 언론이 생산한 사회적 낙인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 매개자를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전이되는 고유한 경로를 강조한다. 이는 낙인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한 Goffman(1963)의 연관 낙인(Courtesy stigma)이나, 규범적 공중의 영향을 강조한 Pescosolido 외(2008)의 낙인 통합 프레임워크와 달리, ‘미디어-전문직-클라이언트’로 연결되는 삼각관계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술적 변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계보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낙인 전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즉, 언론 담론이 생산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결핍과 위험 중심의 왜곡된 시각이 비판적 성찰 역량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낮은 성취 기대감 형성, 자기결정권 침해, 진단명에만 의존하는 사정 등 실천 태도와 개입 방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다만 이 조작적 정의는 담론 분석 결과와 낙인 이론을 상호 교차하여 도출해 낸 이론적 가설이므로, 실제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나타내는 낙인 전이의 실제 인과 경로와 그 영향력의 정도는 현장 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의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6.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 경계선지능인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기 특성 규명과 개입 방안(변관석·신진숙, 2017; 허은, 2022), 교사와 부모의 인식(김진아·강옥려, 2017; 심고은·이대식, 2023)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정책 소외 실태(박광옥 외, 2022), 자치법규 지원 조례 비교(민기채, 2023), 성인기 대학 생활 적응

경험(이세형, 2024b) 등이 다각도로 고찰되었다.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로는 전영선(2024)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는 약 20년간의 보도를 바탕으로 국내 ‘느린학습자’ 명명이 지원 사업과 결부되고, 국외 ‘BIF’가 사법 및 형 집행 어휘와 연관됨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디어 언어 패턴의 양적 탐색에 국한되어, 보도에 내재된 이념적 함의나 사회복지 실천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미디어 프레임이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형성하는 기제나(Corrigan et al., 2005), 미디어 담론이 전문직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Klin & Lemish, 2008). 미디어 재현이 전문직의 인식 구조까지 조건화한다는 가설은 Wahl(1992, 1995)의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Diefenbach(1997)는 매체의 정신장애 묘사가 수용자의 인식 형성과 직결됨을 입증하였다. 최근에는 보도의 논조와 낙인적 태도의 연동 메커니즘을 밝힌 Ross외(2019)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대규모 제도 전환기에도 의존과 시혜의 부정적 재현이 동시대적으로 지속됨을 증명한 Winterbotham 외(2023)의 연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미디어 담론이 전문가의 클라이언트 표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 대중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한다. 학술적 지형 위에서 본 연구는 Entman의 프레임링 이론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결합하여, 16년간 축적된 경계선지능인 담론 구조를 입법 과도기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전문가를 매개로 한 낙인 전이의 이론적 계보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가설적 실천 오류 시나리오와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한다. 이는 전영선(2024)이 양적 기법으로 포착한 어휘 연관성을 거시적 이념 경합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미디어 담론과 실제 복지 실천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직접 측정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상회하므로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혼합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 담론의 구조적 패턴을 양적으로 포착하고 그 이념적 함의를 질적으로 심층 해석하고자, Creswell 외(2018)의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에 기반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채택하였다. 이는 양적 분석을 통해 담론의 현황과 빈도를 규명한 뒤, 질적 분석으로 그 맥락과 원인을 심층 해석하는 구조다. 두 분석 방법의 통합은 두 단계로 연계된다. 첫째, 양적 내용분석으로 도출된 프레임 분포 결과를 비판적 담론분석(CDA) 대상 52건의 표집 기준에 직접 적용하여 프레임 유형별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양적 시계열 분석에서 포착된 주기별 변화, 특히 3주기 의료적 모델 담론의 추이를 질적 텍스트 분석의 집중 탐색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다(Tashakkori & Teddlie, 2010).

2. 양적 내용분석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주요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매체, 방송사 등이 송고한 보도를 텍스트 형태로 수집·제공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영상이나 음성이 아닌 ‘텍스트화된 언론 보도’로 제한된다. 방송사 보도가 포함된 경우에도 영상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 형식의 보도문만을 분석하였으며, 자막이

나 음성 등 비텍스트 요소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수집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까지 약 16년이다. 검색 키워드는 박윤희 외(2022)의 통일 용어 제안을 반영하여 ‘경제선 지능’, ‘느린 학습자’, ‘경제선급 지적기능성’, ‘경제선 지적장애’ 등 4개로 설정하였다. 초기 수집된 2,341건의 기사에 4단계 정제 과정을 적용하여 최종 893건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자료의 투명성과 비편향성을 확보하고자 각 단계의 제외 사유와 제거 건수를 <표 2>에 명시하였다.

<표 2> 자료 수집 및 4단계 정제 과정

항목	내용	제외 사유	제거 (건)	잔여 (건)
수집 기간	2010년 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	2,341
1단계	동일·유사 기사 중복 제거	중복 기사	612	1,729
2단계	경제선지능과 무관한 기사 제거(국경·AI 등 동음이의 포함)	무관 기사	-	-
3단계	본문 100자 미만 포토뉴스·단신 제거	단신·포토	-	-
4단계	기사 원문 접근 불가 건 제거	접근 불가	-	-
확정	최종 분석 대상	-	-	893

주: 2~4단계의 단계별 제거 건수는 사유가 중첩되는 사례가 있어 단일 사유로 환원하기 어려우나, 2단계 이후 누적 제거 건수(836건)를 합산 보고한다. 전체 정제 결과 2,341건 중 1,448건이 제거되고 893건이 최종 확정되었다. 분석 기준 주기는 1주기(2010~2015년) 74건, 2주기(2016~2020년) 339건, 3주기(2021~2025년) 480건이다.

2) 분석 범주 및 코딩 체계

분석 범주는 선행연구(Entman, 1993; Fairclough, 1995; 정지원 외, 2018; 안예자·김동일, 2020)를 참고하여 연역적·귀납적 방법을 결합해 구성하였다.

최종 코딩 체계는 보도 시기 및 언론사 유형, 주제 분류(8개 범주), 프레임 유형(8개 유형), 복지 모델 지향성(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혼합·판단 불가), 정보원 구성(5개) 등 5개 대범주로 설정하였으며, 코딩 기준을 명시한 코드북을 사전에 작성하였다. 한 기사에 복수의 프레임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배적 프레임(dominant frame) 원칙에 따라 기사의 리드·제목·결론부에서 가장 부각된 프레임을 단일 코드로 부여하였다. 분석의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코드북의 핵심 판단 기준과 지시어는 <표 3>에 발췌하여 제시한다.

<표 3> 코딩 체계 핵심 발췌: 프레임 유형 판단 기준 및 지시어

프레임 유형	판단 기준	핵심 지시어	구분(제외) 기준
F1 피해·취약성	피해자·보호 대상으로 묘사, 취약성 강조	‘보호받아야 할’,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F4·F2와 구분
F2 제도적 공백	지원 제도의 부재·미비, 국가·사회 책임 부각	‘사각지대’, ‘제도적 공백’, ‘지원 없는’	F5와 구분
F3 교육적 지원	학습·교육 지원 중심 (학령기 편중)	‘학습 지원’, ‘특수교육’, ‘맞춤형 교육’	성인기 직업훈련은 F1·F5 검토
F4 가해·위험	가해자·위험 인물로 묘사, 범죄·일탈 연루	‘가해자’, ‘충동적’, ‘위험 인물’	피해자 묘사는 F1
F5 정책적 성과	정부·기관의 정책 성과 홍보 중심	‘추진’, ‘발표’, ‘대책 마련’	정책 비판은 F2
F6 권리·주체성	당사자의 권리·자립, 주체성 강조, 직접 발화 포함	‘권리’, ‘자립’, ‘스스로 결정’	피해자 서술 중심이면 F1

프레임 유형	판단 기준	핵심 지시어	구분(제외) 기준
F7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편견 해소	‘인식 개선’, ‘편견 없애기’	특정 기관 초점이면 F3
F8 기타	F1~F7로 분류 불가, 단순 안내·행사	(없음)	어느 프레임도 40% 미만 부각

주: 전체 코드북(부록 A)은 8개 프레임 유형 외에 주제 분류 8개 범주(T1~T8), 복지 모델 판정 의사결정 트리, 정보원 5개 유형(S1~S5) 경계 기준 등을 포함하는 총 11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3) 코딩 신뢰도

코딩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전공 연구자 2인이 독립 코딩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연습 코딩(pilot coding) 15건을 통해 코드북을 보정하였고, 이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 893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90건을 주기별 비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다(1주기 8건, 2주기 34건, 3주기 48건). 본 코딩 90건에 대해 코헨의 카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kappa=.83$ 으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른 ‘거의 완벽한 일치(almost perfect agreement)’ 수준에 해당하였다. 두 코더 간 불일치 기사(약 17%)에 대해서는 제3의 연구자(사회복지학 전공 교수)가 최종 판정자로서 결정하였다.

3. 비판적 담론분석(CDA)

1) 분석 대상 및 표집 원칙

양적 내용분석을 완료한 후, Fairclough(1995)의 3차원 모형을 적용한 심층 질적 분석을 위해 Patton(2002)이 제시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총 52건을 선정하였다. 표집 기준은 <표 4>와 같이 4개 원칙으로 명시화하였으며,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 > ④이다.

<표 4> CDA 분석 대상 52건 선정 기준 및 배분

원칙	선정 기준 적용 방법	배분 건수	우선순위
① 프레임 유형별 대표성	8개 프레임 유형 각각에서 전형 기사를 빈도 상위순으로 선정	30	최우선 적용
② 주기별 균형 배분	3주기 각각에서 균형 배분(1주기 4, 2주기 8, 3주기 6)	18	①과 중복 불가
③ 매체 유형 다양성	중앙·지역·방송·인터넷 4유형 안배 (각 1)	4	①·②와 중복 시 제외
④ 2024~2025 입법국면 추가	2024~2025 입법국면 핵심 기사 집중	2	최종 보완
합계	①~④ 합산 후 중복 조정	52	—

주: ①의 30건을 기준으로 ②~④ 기준을 순차 적용하되, 상위 기준에서 이미 선정된 기사가 하위 기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 계상하지 않았다. 산술 합(30+18+4+2=54)에서 ②·③ 적용 시 발생한 중복 2건을 조정하여 최종 52건을 확정하였다. 표집의 충분성은 8개 프레임 유형 각각에서 3건 이상이 포함된 이후 동일 프레임 내 추가 사례가 새로운 담론적 특성을 산출하지 않는 이론적 포화(Glaser & Strauss, 1967) 시점에서 판단하였으며, 이는 CDA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표본 규모(50건 내외, Wodak & Meyer, 2016)와도 부합한다.

2) 분석 절차

Fairclough(1995)의 3차원 모형을 기반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텍스트 수준에서는 경계 선지능인에 대한 명명 방식, 은유적 표현, 문장 내 주어와 목적어의 배치를 고찰하였다. 둘째, 담론 실천 수준에서는 정보원의 구성 비율과 발언 방식, 당사자 목소리의 직접 인용 여부, 보도자료 의존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수준에서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간의 이념적 경합 구도와 정상성 담론(Davis, 1995)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

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텍스트에서 직접 확인되는 진술과 연구자의 이론적 해석을 기술상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공개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앞서 수립한 4단계 자료 정제 기준, 코더 간 신뢰도 검증, 제3자 판정 중재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해석의 자의성을 통제하였다. 또한 수집된 보도 중 경계선지능인 개인이 특정될 위험이 있는 사례는 성명, 연령, 거주지 등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범주화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담론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일반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 전반에 걸쳐 성찰적 기록을 작성하며 이 원칙의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였다.

IV. 언론 담론 분석 결과

1. 보도량의 시계열적 변화: 3주기 분석

분석 결과, 경계선지능인 관련 언론 보도는 세 주기에 걸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1주기(2010~2015년)에는 총 74건(연평균 12.3건)으로 담론 형성이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주기(2016~2020년)에는 2014년 EBS 탐사보도와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도약대로 삼아 총 339건(연평균 67.8건)으로 분출하듯 증가하였다. 이어 3주기(2021~2025년)에는 2020년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2024년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5년 국회 입법공청회 등 제도화 움직임과 맞물려 총 480건(연평균 96.0건)에 이르며 정점을 기록하였다. 양적 팽창과 달리 담론의 내부 구성은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령기 중심의 교육 관련 보도가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주류 의제를 형성한 반면, 성인기 이행에 필수적인 고용·주거·정신건강 의제는 도합 9.4%에 그쳤다. 특히 2025년 입법 논의 국면에서는 조기진단, 선별, 가정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의료적 모델 프레임이 부각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언론 보도량의 증가가 수반하는 사회적 관심의 확산이 곧 당사자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의 다변화나 질적 성숙으로 직결되지는 않음을 실증한다.

2. 지배적 프레임 구조: 주기별 교차분석

피해·취약성 프레임(31.8%)과 제도적 공백 프레임(26.5%)의 결합은 전체 보도의 58.3%가 경계선지능인을 결핍과 부재의 서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이 당사자를 독자적인 삶의 주체로 조명하기보다, 인지적 취약성을 지닌 보호 대상이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피해자로 주로 재현해 왔음을 의미한다. 시계열적 추이에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담론에 미친 영향이 관찰된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적 성과 프레임은 1주기 2.7%에서 3주기 11.5%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언론이 정부의 정책 홍보 담론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당사자의 주체적 목소리와 자립을 다루는 권리·주체성 프레임은 3주기 기준 5.2%에 그쳐, 제도화 국면에서도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체되고 있다.

<표 5> 경계선지능인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형별 주기 교차분포 (N=893)

프레임 유형	1주기 (74건)	2주기 (339건)	3주기 (480건)	전체 (893건)	추세
피해·취약성	30 (40.5%)	110 (32.4%)	144 (30.0%)	284 (31.8%)	↓

프레임 유형	1주기 (74건)	2주기 (339건)	3주기 (480건)	전체 (893건)	추세
제도적 공백	18 (24.3%)	90 (26.5%)	129 (26.9%)	237 (26.5%)	↑
교육적 지원	14 (18.9%)	66 (19.5%)	63 (13.1%)	143 (16.0%)	↓
가해·위험	6 (8.1%)	42 (12.4%)	54 (11.3%)	102 (11.4%)	↑
정책적 성과	2 (2.7%)	15 (4.4%)	55 (11.5%)	72 (8.1%)	↑
권리·주체성	2 (2.7%)	11 (3.2%)	25 (5.2%)	38 (4.3%)	↑
인식 개선	—	4 (1.2%)	8 (1.7%)	12 (1.3%)	↑
기타	2 (2.7%)	1 (0.3%)	2 (0.4%)	5 (0.6%)	—
합계	74 (100%)	339 (100%)	480 (100%)	893 (100%)	—

주: 비율은 각 주기 내 백분율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pm 0.2\%$ 내외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인식 개선 프레임은 파일럿 코딩 후 F7로 확정된 코드 개정 이후 집계한 수치이다.

3. 정보원 구조의 불균형: 주기별 변화

보도의 프레임 구조와 정보원 구조는 상호 강화되는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피해·취약성이나 제도적 공백 같은 결핍 중심의 프레임이 우세를 점하는 현상은 ‘누가 이 의제를 주도하여 발화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분석 결과, 전문가와 정책입안자가 전체 정보원의 과반인 평균 63.2%를 차지하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진술하기 보다, 전문가의 시선에 의해 ‘해석되고 대변되는’ 객체로 자리매김한다. 시계열적 관점에서 3주기에 이르러 당사자의 직접 인용 비율이 1주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9.8%에서 18.7%로 복귀)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변화가 전문가 중심의 지배적 정보원 구조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은 16년간의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말하는 주체’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말해지는 존재’로 호명되는 구조에 머물렀다.

<표 6> 정보원 유형 구성비 주기별 분포 (N=893, 단위: %)

정보원 유형	1주기	2주기	3주기	전체 평균
전문가·연구자	38.2	35.4	30.1	32.8
정책 입안자·공무원	28.6	29.7	31.2	30.4
교육 관계자	18.4	16.2	13.1	15.3
보호자·가족	5.0	10.5	6.9	7.6
당사자(경계선 지능인) 직접	9.8	8.2	18.7	13.9
합계	100%	100%	100%	100%

주: 당사자 직접 인용 비율은 발언 단위 기준 산출치이며, 전체 893건 기준 평균은 13.9%, 전문가·정책입안자 합산 평균은 63.2%이다.

4. ‘느린 학습자’ 명명의 담론적 기능

‘느린 학습자’라는 명명은 전체 기사 중 33.4%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3주기에는 41.2%까지 급증하며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였다. 이 용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결핍의 시선과 권리 주장의 도구라는 상반된 속성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비장애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찾고 자립하기 위한 긍정적인 언어로 당당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담론의 다층적 맥락을 파악하

고자 텍스트에 나타난 구체적 진술과 이에 파생되는 이론적 해석을 구분하여 고찰한다.

<표 7>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사의 명명 유형별 빈도
(N=893)

사용 명명	건수	비율 (%)	비고
경계선지능인 / 경계선 지능	455	50.9	주요 행정·정책 용어
느린학습자 / 느린 학습자	298	33.4	교육·복지 현장 통용(3주기 41.2%)
경계선급 지적기능성(BIF)	78	8.7	학술 용어
경계선 지적장애	62	6.9	구 진단명에 가까운 표현(각주 참조)
합계(중복 없음)	893	100	

주: 한 기사에서 복수 명명이 사용된 경우 가장 빈번한 명명으로 분류하였다. ‘경계선 지적장애’를 ‘구 진단명에 가까운 표현’으로 분류한 것은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DSM-IV 시기 진단 범주에서 유래한 용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 표현이 낙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은 본문에서 선행연구(Cluley, 2018; 박윤희 외, 2022)를 근거로 별도 논의한다.

‘느린 학습자’라는 명명은 결핍의 담론 및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인식 프레임과 결합하는 현상은 정상성(normalcy) 담론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된다. Davis(1995)의 정상성 담론에 따르면 ‘느림’이라는 규정은 제도적 환경이 설정한 ‘정상 속도’를 암묵적 준거로 전제하며, 이에 미달하는 개인을 일탈적 상태로 범주화한다. 이는 학습 표준 속도만을 강제하는 교육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문제 삼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인지 속도로 귀착시킨다는 점에서, Oliver(1990)가 비판한 개인 비극 모델과 인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의 자료상 명명 자체가 구조적 폭력을 순응하게 만든다는 식의 과도한 인과적 단정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제 원인을 개인에게 귀속시키

는 구조가 관찰되는 수준의 해석으로 제한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이 용어는 정체성을 ‘학습자’라는 학령기 교육 상황으로 협소화하여 성인기의 고용, 관계, 인권 등 다차원적 생애주기 과제를 사각지대화 하는 한계를 지니며, 본 연구에서 교육 관련 보도(38.2%)가 성인기 의제(9.4%)를 크게 상회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체성의 협소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반면 동일한 용어가 당사자 권익운동의 맥락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권리 주체성을 옹호하는 전략적 언어로 재맥락화되어 활용되는 상반된 경로가 확인된다. 비영리단체 ‘피치마켓’이 이 명명을 쉬운 글 콘텐츠 제작과 연계하여 ‘정보 평등’ 및 ‘자립’의 상징으로 표방해 온 사례가 대표적이다(세계일보, 2018). 이 경우 느린 학습자는 배제적 낙인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적 지적장애 범주가 포착하지 못한 집단의 고유한 정보 접근권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적 개념으로 기능한다. 전영선(2024)의 연관어 분석에서 ‘느린 학습자’ 핵심어가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등 자립 지향적 어휘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결과 역시 용어가 지닌 권리·지원 담론의 유효성을 지지한다. Cluley(2018)의 연구가 규명하듯 특정 용어의 낙인성 여부는 명명 자체보다 그것이 배치되는 제도적 맥락과 서사적 인과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느린 학습자 명명은 지배적 언론 담론 내에서 개인의 인지적 결함에 귀착되는 다분히 의료적인 인과 구조를 따르는 동시에, 권익운동 영역에서는 주체적 권리 강화를 옹호하는 대항 담론으로 전유되는 다중적 속성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언론 보도 텍스트만을 주된 자료로 삼았기에 당사자와 가족, 현장 단체가 지닌 실질적인 주관적 선호도를 직접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에 근거한 다각적인 용어 인식 조사가 후속 실증 과제로 요청된다.

5.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이념적 경합

전체 분석 대상 중 의료적 모델(53.4%)이 사회적 모델(19.2%)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적 모델의 비중은 1주기 65.2%에서 3주기 48.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표면적으로는 권리 기반의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 이행이 진행 중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3주기에 두드러진 혼합 담론(22.4%)의 증가는 이러한 표면적 이행 추세와는 전혀 다른 실질적 양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 현상을 사회적 모델의 어휘를 기존 의료적 모델의 서사 구조에 기계적으로 접합하는 ‘수사적 전환(rhetorical transformation)’의 징후로 해석한다. 여기서 ‘수사적 전환’은 Fairclough(2003)의 ‘담론적 재맥락화(discursive recontextualization)’ 개념과 van Dijk(1998)의 이데올로기 재포장 논의를 본 연구 맥락에 맞추어 변용한 것이다. 즉, 텍스트 겉면에서 선택한 어휘는 변화하더라도, 해당 어휘를 배치하고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시적인 이야기 구조는 여전히 개인의 병리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패턴을 의미한다.

<표 8> 복지 모델 지향성 주기별 분포 (N=893, 단위: %)

복지 모델 유형	1주기	2주기	3주기	전체	추세
의료적 모델	65.2	56.8	48.3	53.4	↓
사회적 모델	12.1	17.4	23.1	19.2	↑
혼합(의료+사회)	14.8	18.9	22.4	20.1	↑↑
판단 불가	7.9	6.9	6.2	7.3	—
합계	100%	100%	100%	100%	—

주: 의료적 모델은 경계선지능을 개인의 병리·결함으로 규정하고 진단·치료·선별을 핵심 언어로 사용한다. 사회적 모델은 환경·제도·관계의 변화를 강조하고 권리·접근성·지원을 핵심 언어로 사용한다. 혼합은 두 모델의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사적 전환의 구체적인 양상을 텍스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요 보도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사 원문에 나타난 실제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학술적 해석 과정을 엄밀히 분리하여 서술한다.

1) 유형 A-피해·취약성 프레임(1주기, 중앙일간지, 2013.04.)

“지능이 낮아 학교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느린 아이’들은 오늘도 사각지대를 헤매고 있다.”

- 실제 진술 내용: 기사는 대상자를 ‘아이들’로 호명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동적인 상태를 강조한다. 또한 연령층과 관계없이 전체 경계선지능인을 학령기 아동으로 투영하는 단어 선택이 나타나며, 정보원 측면에서는 전문가나 보호자의 대리 발언만 존재할 뿐 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 학술적 해석: 이 보도는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 환경이 아닌 개인의 인지적 결함(‘지능이 낮아’)으로 귀착시키는 의료적 모델의 전형적인 담론 구조를 보여준다.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이 처한 불행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으며, 당사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시혜의 대상으로 고착시킨다.

2) 유형 B-가해·위험 프레임 (2주기, 종합편성채널, 2018.08.)

‘경계선 지능 피의자, 충동 조절 능력 현저히 부족... 재범 위험성 높아’

- 실제 진술 내용: 보도 텍스트 내에서 ‘피의자’, ‘충동 조절 능력 부족’, ‘재범 위험성’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인용된 정보원은 공식 출처인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가족, 혹은 현장 복지 전문가의 반론이나 맥락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는다.
- 학술적 해석: 경계선급 지적기능성이라는 특성 자체를 범죄 성향이나 위험성과 곧바로 연결하는 낙인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위험성 담론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사회적 통합의 대상이 아닌 격리와 방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인식적 장벽을 형성한다.

3) 유형 D-혼합 담론 (3주기, 중앙일간지, 2024.07.)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정부 부처 관계자 발언.

‘진단 없이 지원도 없다는 논리가 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시민사회 전문가 반론.

- 실제 진술 내용: 기사는 ‘맞춤형 지원’과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의 핵심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조기 발견’과 ‘진단’을 권리 보장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결부시키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의 행정적 관점이 시민사회 전문가의 반론보다 전면 배치되어 있다.
- 학술적 해석: 이 텍스트는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의 자립 원칙에 부합하는 대항 담론의 단초를 포함하고 있으나, 인과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권

리 보장의 전제를 의료적 진단 체계에 종속시키고 있다. 결국 사회적 모델의 언어가 의료적 모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재맥락화되는 모순적 담론 경합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진행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3주기 보도에서 나타난 혼합 담론의 증가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모델로의 실질적인 전환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적 모델의 단어들을 기존 의료적 모델의 논리 구조 안에 다시 배치하는 ‘말 바꾸기식 재포장’일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기사들에서 겉포장만 바꾼 후자의 경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대표적인 몇 가지 기사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수의 기사 표본을 통한 실증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복지 담론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V. 낙인 전이의 가설적 시나리오: 이론적 추론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앞선 담론 분석의 객관적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틀 안에서 도출해 낸 이론적 추론이다. 뒤이어 제시할 세 가지 가설적 시나리오는 언론의 지배적인 담론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해 본 가설들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들이 가진 실제 현장에서의 타당성은 향후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

층 인터뷰나 정밀한 실험 설계 등 후속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1. 낙인 전이의 메커니즘

언론 보도가 생산하는 배제와 고정관념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Goffman(1963)에서 Link와 Phelan(2001), 그리고 Corrigan(2007)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계보에 따르면, 전문가 역시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민이기에 비판적 성찰이 부족하면 지배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는 정신건강 영역의 실증 연구들로 증명되어 왔다. Wahl(1992, 1995)은 미디어의 장애 재현 방식이 전문직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Diefenbach(1997)는 내용분석을 통해 미디어가 정신장애의 폭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음을 밝혔고, Ross 외(2019)는 뉴스·소셜 미디어 분석에서 결핍 중심의 보도는 낙인을 강화하지만, 회복 중심의 보도는 낙인을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미디어 담론의 방향성이 수용자의 태도에 실질적으로 작용함을 뜻한다. 나아가 전문직 종사자가 낙인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최근 연구로 뒷받침된다. Jauch 외(2023)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분석한 문헌고찰에서, 보건·복지 전문가가 일반 대중과 유사한 수준의 낙인적 태도(위험성, 무능력, 비판적 예후 등)를 내면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가는 낙인의 해소자이면서 동시에 재생산자일 수 있다는 Corrigan(2007)의 역설을 보여준다. Winterbotham 외(2023) 역시 호주의 대규모 제도 개혁 국면에서도 미디어가 시혜와 의존의 서사를 지속해서 재생산함을 밝혀, 제도의 변화가 곧 담론의 변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Klin과 Lemish(2008) 또한 미디어의 낙인 담론이 휴먼서비스 전문직의 클라이언트 이해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이 경계선지능인 집단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전문직의 인식 역시 미디어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특히 경계선지능 인처럼 정규 전문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집단일수록 미디어 담론이 실천 판단의 준거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분석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피해·취약성 프레임’, ‘가해·위험 프레임’, ‘의료적 모델 담론’과 연결되는 세 가지 가설적 실천 오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2. 실천 오류 시나리오와 강점 기반 대안

1) ‘피해·취약성 프레임’ 노출에 따른 과보호적 실천 오류

사회복지사A는 경계선지능인 청년 B(22세)가 취업 의사를 밝히자, ‘경계선지능인은 범죄 및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배적인 미디어 보도를 상기하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B와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논의하는 대등한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보호시설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당사자의 주체적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실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개입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온정주의적 처우이자 가부장적 실천(paternalistic practice)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이 명시하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을 위배하는 실천적 오류를 낳는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강점 관점의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사정 단계에서 B가 지닌 고유한 직업적 자산, 즉 업무 성실성, 반복 과업에 대한 숙련도, 기습적 기술 등을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우선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실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클라이언트와 수평적으로 공유하여 공동으로 인

지하되, 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개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세형, 2024b).

2) ‘가해·위험 프레임’ 노출에 따른 정서적 거리 두기와 불신 오류

사회복지사 C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D(19세)를 담당하게 되자, ‘경계선 지능인은 충동 조절이 어렵다’는 언론의 부정적 재현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하였다. 이로 인해 C는 초기 면담 과정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D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확인 질문을 반복하였다. 전문가의 이러한 질문 방식은 D에게 신뢰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축시키고 미디어가 생산한 사회적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부정적 정체성 형성의 악순환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는 실천에 임하기 전 자신이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품고 있는지 성찰적 기록을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해야 한다. 면담 과정에서는 과거의 폭력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D가 당시 처했던 환경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했던 대처 기제 및 강점 자원을 먼저 탐색하며, 비심판적 태도로 신뢰성 있는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 ‘의료적 모델 담론’ 내면화에 따른 진단명 의존 및 당사자 배제 오류

사회복지사 E는 경계선지능 성인 F(30세)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능검사 결과지와 주치의 소견서만을 절대적인 사정 자료로 활용하였다. F가 일반 공장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진로 의사를 피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E는 ‘지능지수(IQ) 72의 인지 수준으로는 독립 근무가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만을 근거로 삼아 격리된 보호작업장 배치를 권고하였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이전의 고용 유지 경험, 선호하는 직무 유형, 실제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리고 유용한 지역사회 지지망 등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맥락을 전문가 사정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간의 복합적인 기능을 지능지수라는 단일한 생물학적 수치로 환원하는 개별 비극 모델의 전형적인 오류이며, 동시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는 Bronfenbrenner(1986)의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F의 다차원적 강점 프로필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프로필에는 당사자의 직무적 관심사와 역량,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개인적 요인, F를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그리고 F가 노동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 환경의 합리적 편의 조정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의 가설적 시나리오들은 ‘미디어 담론 노출 → 사회복지사의 무의식적 낙인 내면화 →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 오류 유발 → 당사자의 자기낙인 강화’로 이어지는 동일한 구조적 경로를 공유한다. 다만, 본 장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은 양적·질적 담론 분석 결과로부터 직접 귀납적으로 도출된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미디어 프레임 분석 결과와 거시적 낙인 이론을 상호 교차하여 도출해 낸 이론적 추론이자 가설적 모델이다. 실제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태도와 판단 기제가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인식 프레임에 의해 어떠한 인과적 경로로 얼마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객관적 검증은 현장 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의 실증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VI.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방안:

3대 핵심 역량

본 장에서 제안하는 역량 강화 방안은 별도의 독립 교과나 전원 의무 이수와 같은 제도 신설을 우선하지 않는다. 언론 담론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공적 담론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사회복지 전문직 내부의 교육에 국한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기존 사회복지 교과 내에 관련 내용을 모듈로 통합하고, ② 보수교육·슈퍼비전 체계를 활용하며, ③ 전 사회적 차원의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을 제안한다. 아래의 12주 모듈은 이러한 통합·활용을 위한 선택적·시범적 예시로 제시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시범 운영을 통한 검증은 전제로 한다.

1. 제1역량: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언론의 지배적인 인식 프레임이 사회복지사의 무의식적 편견 형성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재현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된다. 이 역량은 미디어가 특정 사건을 다루는 프레임 인식 능력, 개인의 병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료적 모델과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모델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권리 기반의 대항 담론을 구성하는 능력의 세 차원을 유기적으로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의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학제 내 독립된 교과목을 새로 개설하기보다 기존의 표준 교과과정 내에 특정 모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등 현행 전공 교과목의 일부 차시에 미디어 담론 분석과 낙인 이론 관련 단원을 배치하

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이 보건복지 전문직의 실천 능력을 신장시키고 현장 낙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학술적 근거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사회복지 교육의 측면에서는 Dumbrell과 Green(2008)이 교육과정 내 비판적 성찰 모듈의 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장애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Corrigan 외(2005)가 미디어 프레임 분석을 활용한 반낙인 교육이 지배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표 9>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천 현장과 대학 교육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한 ‘미디어 담론과 사회적 낙인’ 학습 모듈의 구체적인 시범 구성안이다.

<표 9> ‘미디어 담론과 사회적 낙인’ 학습 모듈(시범안),
12주 구성 예시

주차	모듈명	주요 학습 내용	핵심 활동
1~2주	프레임 이론의 이해	Entman(1993)의 4기능 학습; 동일 사건 기사 비교를 통한 프레임 차이 식별	기사 5건의 프레임 유형 분류 실습
3~4주	기사 프레임 식별 워크숍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사 10건의 소그룹 분석	소그룹 발표 및 상호 피드백
5~6주	의료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비교	동일 집단에 대한 두 모델의 기사 쌍 비교 분석	모델별 실천 차이 역할극 체험
7~8주	정보원 분석과 당사자 목소리	정보원 비율 분석; 당사자 발언 인용 방식의 담론 효과 분석	대안 기사 초고 작성 실습
9~10주	사례 기반 슈퍼비전 훈련	현장 사례에서 미디어 담론 영향을 받은 실천 오류 사후 점검	성찰적 기록 및 동료 슈퍼비전

주차	모듈명	주요 학습 내용	핵심 활동
11~12주	역담론 구성	권리 기반 서사 활용 대안 기고문 작성	독자 기고 또는 공개 포스팅 과제

주: 5~6주차 역할극은 Kolb(1984)의 경험 학습 주기(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관찰자' 3인 1조로 의료적 모델 프레임 면담과 사회적 모델 프레임 재면담을 비교 체험하고 디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 체계 내에 실제 보도를 활용하는 사례 기반 슈퍼비전(case-based supervision)을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2. 제2역량: 강점 기반 실천 기술 역량

지배적인 언론 담론이 생산하는 결핍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휴먼서비스 현장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점 관점을 단순한 철학적 신념을 넘어 구체적인 기술 체계로 체화하여 개입에 적용해야 한다. 이 역량은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는 강점 탐색 인터뷰 기술,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강점 프로필 기반의 개별화 지원 계획 수립 기술, 그리고 당사자의 자립을 도모하는 주체적 역량강화 기술을 유기적으로 아우른다. 실천 현장의 전문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세 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강점 탐색 질문지(Strengths Interview Guide)'를 현장에 적용하고 숙달하기 위해 대면 역할극(Role-play) 중심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능지수(IQ)라는 단일한 생물학적 수치에 의존하던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개별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구체적인 욕구, 활용 가능한 환경적 자원, 그리고 노동 및 일상 환경의 변화를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사항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개별화 지원 계획(Individual Support Plan) 수립 방식을 훈련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국의 개인중심계획(PCP) 모델을 국내 실천 맥락에

맞추어 변용한 Cambridge(2008)의 논의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 계획 수립 회의(person-led planning meeting)'의 진행 및 조율 기술을 연마한다. 현장 전반에 퍼진 낙인적 담론을 상쇄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이러한 단계별 기술 훈련을 거쳐 개별화된 강점 사정 도구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3. 제3역량: 담론적 옹호 역량

사회복지사는 개별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미시적 실천을 넘어, 그들을 둘러싼 배제적 사회 환경과 언론 담론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실천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 역량은 대중매체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미디어 활용 능력, 입법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법안 의견서를 작성하는 정책 담론 참여 능력, 그리고 주변화된 당사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확산시키는 실천적 능력을 고루 아우른다. 특히 언론 담론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전체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공적 기제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은 전문직 내부의 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문가는 공론장 전면에 나서서 경계선지능인을 시혜나 보호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결핍 서사를 비판하고, 이들을 온전한 자립생활의 주체로 규정하는 권리 기반 서사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담론적 옹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공청회 참여 및 의견서 작성을 실무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하며, 실천 현장에서는 당사자 단체와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제도화하여 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구조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직이 이러한 거시적 옹호 주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미디어가 유발하는 낙인이 복지 현장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경계선지능인의 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표 10> 사회복지사 3대 핵심 역량 및 구체적 강화 방안
종합

역량	주요 내용	교육 방안	현장 적용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프레임 인식· 모델 분별· 역담론 구성	기존 교과 내 모듈 통합, 보수교육 활용	사례 기반 슈퍼비전
강점 기반 실천 기술	강점 탐색 인터뷰·강점 프로필 기반 ISP·역량강화	3단계 훈련(역할극→ ISP→당사자 주도 회의)	낙인 전이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담론적 옹호	미디어 접근· 정책 담론 참여·당사자 목소리 증폭	입법 공청회 참여, 의견서 작성 실무 훈련	당사자 단체·기관 파트너십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사회복지학적 함의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년간 생산된 893건의 언론 보도와 52건의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여 경계선지능인을 다루는 주류 언론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언론은 경계선지능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피해·취약성 프레임(31.8%)과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는 제도적 공백 프레임(26.5%)을 중심으로 결핍과 부재의 서사를 이중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결함으로 규정하는 의료적 모델(53.4%)이 사회적 모델(19.2%)을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평균 13.9%에 그치는 주변화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특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포착한 혼합 담론(20.1%)의 성격은 단순히 복지 패러다임이 진전되는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 질적 분석에서 확인되듯, 최근 언론은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의 단어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의료적 진단과 선별이라는 과거의 인과 구조 안에 종속시키는 ‘수사적 전환(Rhetorical transformation)’의 모순적 경합 상태를 보였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선별과 진단’이 가져올 사회적 낙인의 위험성과 궤를 같이하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제화 단계에서 담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환기한다. 또한 3주기에 급격히 확산된 ‘느린 학습자’라는 명명 역시 지배적인 언론 영역에서는 개인의 인지 속도 차이로 원인을 귀착시키는 정상성 담론에 갇히는 반면, 당사자 권익운동의 맥락에서는 고유한 정보 접근권과 권리 주체성을 옹호하는 전략적 언어로 전용되는 다중적 궤적을 보였다. 명명의 낙인성 여부는 표현 자체보다 그 용어가 결핍의 서사에 놓이는가 혹은 권리의 서사 안에서 재구성되는가라는 거시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학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함의를 창출한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미디어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삼각 구조 속에서 일반 공중의 낙인이 실천가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이전되는 ‘낙인 전이(Stigma transfer)’ 경로를 거시적 분석 단위로 안착시켰다. 이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강조하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존중과 전문적 옹호의 책무가 개별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단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실천가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노출되는 사회적 담론 환경의 비판적 성찰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모듈을 구체적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한다. 셋째, 실천적 차원에서는 실무자들이 진단명이나 지능지수라는 단일한 수치에 의존하여 가부장적 실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현행 사례관리 및 옹호 매뉴얼 내에 낙인 전이 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와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한 다차원적 강점 프로파일 사정 도구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정책적 제언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다층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일반 시민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대중매체의 담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보도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직 교육에 앞서 사회적 차원의 편견을 예방하는 공적 기제로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취약계층 보도 준칙’ 체계 내에 경계선지능인 지침을 신설하고, 당사자 목소리의 직접 인용 비율 제고, 가해 및 위험 프레임 적용 시 맥락적 설명 의무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인기 삶의 균형 있는 보도 촉진, 지원책이 결여된 조기 선별 중심 담론의 부작용 경계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입법 과도기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 제정은 환경의 변화와 권리 옹호를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을 핵심 이념으로 채택해야 한다. 법안의 목적을 단순한 시혜적 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궁극적인 자립 지원과 권리 보장 강화로 설정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의 자립생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 고용 환경 개선, 정보 및 인프라의 접근성 보장, 범부처 협력 체계에 기반한 통합 사례관리를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미디어 낙인이 실천 현장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 교육 과정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신설 교과목의 의무 이수와 같은 경직된 방식보다, 기존의 전공 교육과정 내에 미디어 담론 성찰 단원을 배치하는

모듈 통합 방식과 실무자를 위한 보수교육 및 사례 기반 슈퍼비전 체계를 활용하는 점진적 접근이 실효성 높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주도로 표준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본 연구가 제안한 12주 학습 모듈과 3단계 강점 관점 실천 훈련 프로그램을 거점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여 실증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우선 담론 분석의 대상이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에 수록된 텍스트 형태의 언론 보도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다각도로 생산되는 방송 기사의 영상, 자막, 음성 등 비텍스트적 역동은 물론,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다차원적인 공적 담론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양적 및 질적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느린 학습자’라는 명명의 다중적 속성과 사회적 함의는 언론 보도 자료라는 간접적인 텍스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해당 용어에 대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련 현장 단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관적인 인식과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당사자 집단을 표집하여 수행하는 다각적인 용어 선호도 조사가 별도의 연구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언론 담론이 현장 사회복지사의 사정 방식과 개입 태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세 가지 실천 오류 시나리오는 미디어 프레임 이론과 낙인 이론의 선행 계보를 교차하여 분석적 추론으로 도출해 낸 가설적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지

배적인 사회적 프레임이 현장 실천가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나 정밀한 실험 연구 설계 등 실증적인 검증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분석 범위가 2025년 11월 30일 자 보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후 급격하게 전개되는 입법 국면과 단독 지원 법률 제정 이후의 담론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지 못했다. 정책 집행과 법제화의 실제적 변화가 장애 모델 패러다임과 미디어 재현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흐름을 관통하는 종단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아, 강옥려 (2017).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학습장애연구*, 14(3), 157-184.
- 민기채 (2023).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비교 연구. *장애와 고용*, 33(4), 195-229.
-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경계선 지능 청년의 정책 소외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윤희, 박승희, 한경인 (2022).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통일된 용어 제안 및 교육지원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57(2), 31-69.
- 변관석,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 심고은, 이대식 (2023). 경계선급 지적 기능(BIF)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 사항. *통합교육연구*, 18(2), 123-143.
- 안예지, 김동일 (2020).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의 주제어 및 토픽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4(4), 27-50.
- 이세형 (2024a).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자) 특성을 지닌 경기도 S대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 역량 및 정신건강 검사 도구 활용 방안. *GRI연구논총*, 26(3), 45-72.
- 이세형 (2024b). 경계선지능 청년의 대학 적응 경험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경기도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17(1), 1-30.
- 전영선 (2024).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관련 국내외 보도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원, 이재민, 최소연 (2018).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언론에서의 장애인 노동의제 분석. *장애의 재해석*, 48-10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강령*(2023년 4월 11일 개정).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허은 (2022).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187-200.
- 세계일보(2018년 12월 2일). "느린학습자들 정보 평등 이루는 게 우리 꿈". <https://www.segye.com> (2025년 11월 30일 검색).
- 관계부처 합동 (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서울: 교육부.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Cambridge, P. (2008). The case for a new 'case management' in service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1), 91-116.
- Cluley, V. (2018). From 'learning disability to intellectual disability': Perceptions of the increasing use of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in learning disability policy, research and

- practice.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6(1), 24–32.
- Corrigan, P. W. (2007). How clinical diagnosis might exacerbate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Social Work*, 52(1), 31–39.
- Corrigan, P. W., Watson, A. C., Gracia, G., Slopen, N., Rasinski, K., & Hall, L. L. (2005). Newspaper stories as measures of structural stigma. *Psychiatric Services*, 56(5), 551–556.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8).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3rd ed.). SAGE.
- Davis, L. J. (1995).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Verso.
- Diefenbach, D. L. (1997). The portrayal of mental illness on prime-time televi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3), 289–302.
- Dumbrill, G. C., & Green, J. (2008). Indigenous knowledge in the social work academy. *Social Work Education*, 27(5), 489–503.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Aldine.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Prentice-Hall.
- Gray, M. (2011). Back to basics: A critique of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Families in Society*, 92(1), 5–11.
- Hassiotis, A., Noor, M., Perez-Achiaga, N., & Rees, S. (2022). Adaptive behaviour an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42, 104871.
- Hatton, C., Emerson, E., Robertson, J., & Baines, S. (2017).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mild/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England.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61(2), 164–173.
- Jauch, M., Occhipinti, S., & O'Donovan, A. (2023). The stigmatization of mental illness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coping review and bibliometric analysis. *PLoS ONE*, 18(1), e0280739.
- Klin, A., & Lemish, D. (2008). Mental disorders stigma in the media: Review of studies on production, content, and influenc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3(5), 434–449.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 Orío-Aparicio, C., Bel-Fenellós, C., & López-scribano, C. (2025). *Understanding adaptive skills i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vestigation in Health, Psychology and Education*, 15(3), 412–431.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SAGE.

- Peltopuro, M., Ahonen, T., Kaartinen, J., Seppälä, H., & Närhi, V. (2014).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6), 419–443.
 - Pescosolido, B. A., Martin, J. K., Lang, A., & Olafsdottir, S. (2008). Rethinking theoretical approaches to stigma: A Framework Integrating Normative Influences on Stigma (FINIS).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431–440.
 - Rapp, C. A., & Goscha, R. J. (2011). *The strengths model: A recovery-oriented approach to mental health services*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A. M., Morgan, A. J., Jorm, A. F., & Reavley, N. J.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media reports of severe mental illness on stigma and discrimination, and interventions that aim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4*(1), 11–31.
 - Saleebey, D. (200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ed.). Pearson.
 - Tashakkori, A., & Teddlie, C. (2010). *SAGE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2nd ed.). SAGE.
 - van Dijk, T. A.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SAGE.
 - Wahl, O. F. (1992). Mass media images of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4), 343–352.
 - Wahl, O. F. (1995). *Media madness: Public images of mental illness*. Rutgers University Press.
 - Winterbotham, S., Knight, B. G., & du Preez, J. (2023). Real change or more of the same? Analysing Australian media’s portray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during the NDIS rollou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6*(3), 571–584.
 - Wodak, R., & Meyer, M. (2016).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3rd ed.). SAGE.
- 투고일자: 2026. 4. 29.
심사일자: 2026. 5. 26.
게재확정일자: 2026. 6. 5.

Media Discourse Analysis of Person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Enhancement Strategies for Social Work Practice Competencies

– A Critical Analysis of Framing, Representation, and Welfare Discourse –

Se Hyung Lee

Shingu University

Person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comprise 13.59% of the population but face exclusion because of their liminal status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This study analyzed South Korean media representations of BIF using an explanatory sequential mixed-methods design by examining 893 news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25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qualitativ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he quantitative results showed the dominance of “victim/vulnerability” (31.8%) and “institutional gap” (26.5%) frames. The medical model (53.4%) significantly outweighed the social one (19.2%). A recent increase in mixed discourse (20.1%) reflects a “rhetorical transformation” that superficially grafts rights-based vocabularies onto individual-deficit narratives. Experts and policymakers dominated news sources (63.2%), whereas self-advocates were marginalized (13.9%). The label “slow learner” functioned as both a deficit-oriented designation and a strategic tool for rights-based independence. Drawing on Goffman, Link and Phelan, and Corrigan, this study conceptualizes a mechanism of “stigma transfer” in which social workers unconsciously internalize media biases, leading to paternalistic practice errors. Critical media literacy, strengths-based skills, and discursive advocacy, operationalized through a curriculum module and macro-policy guidelines, may help mitigate this mechanism.

Key words: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edia Discourse Analysis, Framing Theor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tigma Transfer